

특집논문 비판지리학자 최병두, 비판적으로 읽기

한국의 도시와 지역에 대한 최병두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비판적으로 읽기* 장소의 특수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기준으로

A Critical Reading on Choi Byung-Doo's Political-Economic Analysis
of Korean Cities and Regions

이후빈**

이 논문은 최병두의 정치경제학적 도시와 지역분석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시도한다. 비평의 대상은 최병두가 실시한 한국의 도시공간 생산과 지역불균등발전에 대한 분석이고, 비평의 기준은 한국의 구체적 현실을 자본축적 논리로 설명하기 위한 장소의 특수성과 논리적 일관성의 통합이다. 최병두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은 공간 문제를 물리적 현상을 넘어 사회적 과정으로 바라보는 인식론적 전환을 촉구했지만 한국 자본주의의 독특한 시공간성을 명확하게 규명했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공간정치경제학의 추상적 이론을 그대로 적용한 분석은 한국 공간환경의 특수성을 포착하지 못했고, 장소의 특수성을 강조한 분석은 일관된 자본축적의 논리로 이어지지 못했다. 필자는 한국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공간성을 파악하기 위해 최병두가 제시했지만 아직 정교하게 다듬지 않은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도시와 지역에서 나타나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BK21플러스사업(4-Zero 지향 국토공간창조사업단,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그리고 익명의 심사위원들이 제시한 날카로운 심사 평가가 없었다면 초고를 현재와 같이 수정하고 보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후의 모든 오류는 필자의 책임이지만 제목을 포함해서 논문의 목적과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중요한 논평을 해주신 심사위원들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서울대학교 BK21플러스 4-Zero 지향 국토공간창조사업단 BK조교수(hunam007@snu.ac.kr)

는 독특한 신자유주의화, 즉 국가가 자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고 자본이 이 모순적 상황을 활용해서 탈취에 의한 축적을 강화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공간정치경제학, 도시공간 생산, 지역불균등발전, 장소, 자본축적

1. 서론

이 논문은 최병두의 정치경제학적 도시와 지역 분석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시도한다. 최병두는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와 석사과정생이었던 1979년부터 지금까지 191편의 논문과 105권의 저서를 발간하면서 왕성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¹⁾ 그리고 그는 1987년 영국의 리즈대학교(University of Leeds) 지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1970년대 서구 사회에서 등장한 공간정치경제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특히 한국 공간환경학회의 전신인 한국공간환경연구회의 초대 회장으로 그 누구보다 공간정치경제학을 한국 사회에 알리는 데 앞장섰다. 그렇다고 그의 연구 활동이 단순히 공간정치경제학을 소개하는 데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그는 도시적 소외와 같은 새로운 이론적 주제를 발굴하고 한국의 도시와 지역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수행했다. 도시화, 건설 투자, 부동산 시장, 신행정수도 등에 대한 그의 분석은 한국의 구체적인 현실들을 단순히 개별 사실들로 기술하는 것을 넘어서 자본축적의 논리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측면에서 최병두가 수행한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비판적

1) 논문과 저서의 수치는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홈페이지의 연구활동자료를 근거로 산정되었다. <https://www.daegu.ac.kr/kor/phone/booklist.do?dguid=18077&code=1>(검색일: 2018.11.15). 다른 학자들과 공동으로 작업한 논문과 저서는 각각 한 편과 한 권으로 책정했다.

으로 평가하는 작업은, 특정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론 탐구보다는 현실 분석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분적이지만, 한국 공간정치경제학의 발전과 성과를 검토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비평의 대상은 최병두가 실시한 한국의 도시공간 생산과 지역불균등발전에 대한 분석이고, 비평의 기준은 한국의 구체적 현실을 자본축적 논리로 설명하기 위한 장소의 특수성과 논리적 일관성의 통합이다. 공간정치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공간환경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방법론을 의미하므로 그 연구주제로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간적 현상들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최병두는 초국적 이주, 환경생태, 다문화공간 등을 포함해서 상당히 폭넓은 주제들을 활발하게 분석했다. 이 논문은 이 중에서 도시공간의 생산과 지역불균등발전의 분석에만 초점을 맞춘다.²⁾ 그리고 이런 분석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최병두가 제시하는 자본축적의 논리에 기초한 정치경제학적 설명이 한국의 도시와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을 파악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독특한 시공간성을 규명하는 데 얼마나 유용한가이다. 한국의 도시와 지역에 대한 최병두의 정치경제학적 설명이 가진 함의를 분석하는 이런 작업은 구체적으로 장소의 특수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두 축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장소의 특수성은 한국 자본주의의 독특한 시공간성을 포착하는 것을, 논리적 일관성은 한국의 구체적 현실을 자본축적의 논리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장소의 특수성과 논리적 일관성의 통합 여부는 자본축적의 논리로 한국의 공간환경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이면에 있는 독특한 사회구조적 과정을 파악했는지로 판단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절에서 비평의 대상과 기준을

2) 참고로 김용창(2000a)은 공간정치경제학의 주요 성과로 도시정치경제학, 지역불균등발전론, 공간의 정치학과 계획론을 언급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힌다. 주제별 선정과 목적의 구분을 통해서 최병두의 연구 중에서 비평의 대상인 한국이 도시공간 생산과 지역불균등발전에 대한 최병두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선정한다. 또한 비평의 구체적 기준으로서 장소의 특수성과 논리적 일관성의 통합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한다. 3절은 최병두의 이론 탐구를 중심으로 공간정치경제학의 이론적 내용을 정리한다. 한국의 도시와 지역에 대한 최병두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간정치경제학이 이론적으로 도시공간의 생산과 지역불균등발전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론으로서 공간정치경제학이 다른 접근들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고, 공간정치경제학의 세부 주제로서 도시공간의 생산과 지역불균등발전이 자본주의적 도시공간과 공간구조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파악한다. 그리고 4절은 비평의 실질적 부분으로 최병두가 실시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이 한국의 독특한 공간환경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유용한지를 장소의 특수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먼저 최병두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이 한국의 공간정치경제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고, 그 다음 필자가 생각하는 최병두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이 가진 한계와 그 대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절 결론에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 의의와 한계를 제시한다.

2. 비평의 대상과 기준

비평의 대상은 최병두의 도시공간 생산과 지역불균등발전 분석이다. 비평의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서 먼저 최병두의 연구 중에서 공간정치경제학, 도시공간의 생산, 지역불균등발전에 해당하는 것을 선정했다. 공간정치경제학은 자본주의의 공간적 현상을 정치경제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연구방법론이다. 그리고 공간정치경제학의 세부 주제로서

도시공간의 생산과 지역불균등발전은 각각 자본주의적 도시공간의 미시적 형성과 거시적 동학을 설명한다. 도시공간의 생산이 도시공간의 자본주의적 형성을 생산의 개념으로 포착한다면, 지역불균등발전은 거시적 관점에서 도시공간의 개별적인 생산들을 종합해서 자본주의의 공간구조를 역동적으로 구성한다.³⁾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최병두의 논문과 저서 챕터 중에서 총 28편의 연구들을 뽑았다. 그리고 이 28편을 다시 연구의 목적에 따라 이론 탐구와 현실 분석으로 구분했다. 한국의 공간환경과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공간정치경제학 내 현실 분석으로 분류했다. 주제별 선정과 목적의 구분을 통해 <표 1>과 같이 여섯 개의 유형들을 도출한 다음 도시공간의 생산과 지역불균등발전의 현실 분석을 비평 대상으로 삼았다. 이론 탐구로 구분한 연구들은 최병두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비판적으로 읽으려는 이 논문의 목적상 비평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최병두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작성하는 데 이론 탐구 연구들을 활용했다. 그리고 공간정치경제학 내 현실 분석으로 구분한 연구들은 이론 탐구와 마찬가지로 비평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서 한국의 공간환경과 정책에 대한 최병두의 전반적인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

비평의 대상을 현실 분석으로 한정된 것은 이념적·이론적 논쟁보다는 최병두가 제시한 정치경제학적 설명이 한국의 도시와 지역을 설명하는 데 얼마나 유용한지를 평가하는 데 비평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이론적 논쟁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지만 이론적 논쟁은 공간에 대한 기초 인식과 개념 정의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쉽게 이념적 논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⁴⁾ 그리고 공간정치경제학은 장소의 다양성에 기초해서 자본주의

3) 공간정치경제학 그리고 도시공간의 생산과 지역불균등발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3절을 참고할 수 있다.

4) 김공회(2006)는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의 제국주의론을 이론적 관점에서 비

〈표 1〉 비평의 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주제별 선정과 목적의 구분

공간 정치경제학	이론 탐구	최병두, 1988	행동과 구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방법론의 변천과정 탐색 (행동과 구조의 이원론 지속, 공간과 사회의 이원론 극복)
		최병두, 1998	자본축적 논리를 중심으로 사회와 공간의 상호작용 포착 (차이를 강조하는 국지성 논쟁과 역사-지리적 진리 추구)
		최병두, 2000b	실증주의의 대안으로서 주제적 행위 또는 구조적 본질 (행위분석과 구조분석, 미시분석과 거시분석 간의 괴리)
		최병두, 1996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정치경제학의 재구성 (자본주의 공간의 정치경제학과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최병두, 2000c	도시·지역 연구에 있어서 구조화이론의 함의와 한계 (행위와 구조의 관계 및 사회와 공간의 관계 재인식)
		최병두, 2000d	도시·지역 연구에 있어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함의와 한계 (장소의 고유성 강조 또는 자본축적의 보편성 유지)
		최병두, 2007b	공간정치경제학과 신(新)이론의 접합 그리고 내적 일관성 (행위적·문화적·환경적 측면의 강조와 여전한 자본의 논리)
		최병두, 2007c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서 혁신에 따른 초과이익의 확보 (도시 간 경쟁의 혁신 강요와 투기에 의한 불안정화)
	현실 분석	최병두, 1989	예측적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 한국공간환경의 발전과정 (독점의 강화과정이자 세계체제로의 예측의 심화과정)
		최병두, 1991b	가시적 공간현상을 야기하는 사회구조적 메커니즘 이해 (자본주의의 역사적 보편성과 한국의 주변부적 특수성)
		최병두, 2007a	한국의 신자유주의화: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 (시장을 위한 시장개입 확대와 사회공간정책의 혼종성)
		최병두, 2011a	탈취에 의한 축적과 신자유주의적 공간정책 (사회적 부의 재분배와 창조적 파괴를 통한 양극화)
		최병두, 2011b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과정으로서 기업주의 도시의 특성 (창조적 파괴를 전제로 한 기업주의 거버넌스 구축)

평하면서 ‘자본논리’와 ‘영토논리’가 변증법적 대립 쌍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먼저 그는 하비가 경제와 정치의 이분법에 기초해 있다고 가정하고 ‘자본논리’를 경제에, ‘영토논리’를 정치에 관련시킨다. 그 다음 “‘영토논리’란 ‘자본축적논리’의 반정립(antithesis)이라기보다는 그것의 배경을 구성할 따름이”(김공희, 2006: 147)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배경으로서 ‘영토논리’는 정치와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즉 정치에는 영토적이지 않은 행위도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와 정치 사이의 변증법은 성립할 수 있더라도, ‘자본논리’와 그 배경인 ‘영토논리’의 변증법은 애초부터 성립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이와 같은 논리적 흐름은 결국 사회와 공간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해서 공간을 사회적 과정으로 가득 채워지는 텅 빈 절대적 공간으로 보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와 공간의 이원론적 구분과 절대적 공간론이 공간정치경제학이 이론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도시공간의 생산	이론 탐구	최병두, 1994a	자본주의 도시공간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설명 (자본축적, 재생산, 소비문화, 정치)
		최병두, 2000a	도시공간의 자본축적 논리로의 편입과 도시의 탈장소화 (도시의 자본화와 그 산물로서 장소와 정체성의 상실)
		최병두, 1990b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주택의 특성에 대한 설명 (의제적 가치의 형성과 토지의 사적 소유)
		최병두, 1992	국가의 토지시장 개입과 자본주의적 토지정책의 합의를 (자본축적의 지원과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 사이 모순)
	현실 분석	최병두, 2016	경제위기에서 도시위기로의 전환과정 분석과 대안 모색 (경제위기 상황에서 도시공간의 재편과 공유재의 축소)
		최병두, 1991a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소유 편중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 (주택 상품화의 자본축적 과정과 국가의 계급적 주택정책)
		최병두, 2010	경부고속도로의 건설과 효과에서 나타나는 정치경제지리 (통치자의 지전략, 기계공간 이념, 시공간 압축과 구획화)
		최병두, 2007d	신자유주의적 도시정책: 민자유치를 통한 인프라 건설 (자본의 이윤 추구와 인프라의 공공재적 성격 사이 모순)
		최병두, 1990c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에 기초한 대도시 지가 분석 (지대유형 그리고 사회공간적 구조와 도시개발과정)
		최병두, 2009	공급-수요 원리에 맞지 않는 주택시장의 변동성 (독점시대 추출과 부동산 금융화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지역불균등 발전	이론 탐구	최병두, 2015	불균등발전: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까지 (자연과 공간의 생산, 차별화와 균등화 경향, 규모의 생산)
	현실 분석	최병두, 1990a	산업구조의 조정과 이를 통한 사회공간구조의 재편 (독점자본의 형성과 국가 주도적 지역불균등발전)
		최병두, 1994b	1980년대 산업구조조정과 공간재구조화에 대한 해석 (주변성의 탈각과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성숙)
		최병두, 2003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논의의 쟁점, 특히 효과 논란 (수도권의 집중 해소와 지역불균등의 시정을 위한 수단)
		최병두, 2004	지역불균등발전에서 본 수도권 집중과 신행정수도 건설 (자본축적의 논리에 따른 지역불균등발전과 공간적 조정)

의 시공간적 국면들에서의 서로 다른 역사-지리적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한국 자본주의의 독특한 시공간성을 규명하는 최병두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비판적으로 읽으려는 시도는 한국 공간정치경제학의 발전과 성과를 검토하는 측면에서 공간정치경제학에서 최병두의 이론적 기여를 파악하려는 비평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구에서 발전한 추상적 이론인 공간정치경제학을 우리가 연구하는 목적은 결국 이를 통해 한국의 도시와 지역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사실을 더 잘 이해하는 데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논문의 비평은 한국 공간환경연구회가 1993년에 출간한 『서울연구』에 대한 장세훈(1994)의 비평과 일부분 맞닿아있다. 장세훈(1994)은 자본축적의 논리를 강조하는 정치경제학적 방법론의 활용이 특정한 공간적 현상들을 단순히 나열해서 서술하는 ‘천박한 실증주의’ 또는 ‘조악한 경험주의’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해주지만 추상적 거대이론인 정치경제학을 한국에 단순히 적용하려는 시도는 한국의 공간적 현상들이 가진 독특한 성격을 포착하지 못하고 정교한 개념 도식을 기준으로 특정 사실들을 억지로 재단하는 거대이론의 성급한 검증으로 끝나기 쉽다고 주장했다.

비평의 기준은 장소의 특수성과 논리적 일관성의 통합이다. 이 논문은 최병두가 실시한 한국의 도시와 지역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이 한국의 공간적 현상들이 가진 독특한 성격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그 설명의 토대로서 자본축적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하는지를 검토한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실제적인 역사지리를 규명하려는 시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간이 만들어내는 장소의 특수성과 차이에 직면하여 어떻게 공간에 관한 일반이론을 유지하고 정교화할 것인가라는 점이다”(최병두, 1996: 214). 하비(Harvey, 1993)는 장소가 시간 또는 공간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회적 구성물이므로 장소 자체도 사회적 과정, 더 구체적으로 자본주의적 공간 생산의 논리 속에서 건설된다고 주장한다. 장소를 자본축적의 논리로 끌어들이는 핵심 기제는 시공간 압축과 장소 간 경쟁이다. 거리의 장벽을 시간으로 극복하는 시공간 압축은 물리적·영토적 조건에 기초하는 장소의 고전적, 즉 공간적 정의를 허물었다. 이제 장소는 어디에 있느냐의 의미보다는 그곳이 자본축적에 얼마나 유리한가로 정의된다. 그렇다고 장소의 차이가 사라지고 획일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본은 이동성이 높아지면서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장소들 사이의 작은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었

고, 자본투자를 놓고 벌이는 장소 간 경쟁 속에서 한 장소의 사람들은 자신의 장소를 다른 장소들과 차별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장소의 차이가 자본에게 더 매력적이게 보이기 위해서 생산된다는 논리는 곧 장소의 특수성을 자본축적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장소의 특수성과 논리적 일관성의 통합 여부를 자본축적의 논리가 한국의 특수한 공간적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독특한 사회구조적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지로 파악한다. 장소의 특수성, 즉 한국 자본주의의 독특한 시공간성은 눈에 보이는 공간적 현상보다는 그런 현상을 생산하는 사회구조적 과정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3. 공간정치경제학 그리고 도시공간의 생산과 지역불균등발전

제3절은 최병두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공간정치경제학 그리고 도시공간의 생산과 지역불균등발전의 이론적 내용을 정리한다. 공간정치경제학은 자본주의의 공간적 현상을 분석하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이자 공간의 관점에서 정치경제학을 재구성하는 이론적 기획이다. 새로운 연구방법론으로서 공간정치경제학이 공간적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연구방법론과 어떻게 다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다양성을 특징으로 갖는 공간적 현상을 포함해서 정치경제학을 다시 쓰려는 이론적 시도에 어떤 난관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공간정치경제학의 세부 주제로 도시공간의 생산과 지역불균등발전은 각각 자본주의의 도시공간과 공간구조를 그 분석 대상으로 한다. 전자에서는 도시공간이 자본의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생산되는지 그리고 도시공간의 생산이 자본축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다룬다. 두 번째 세부주제인 지역불균등발전은 현실에 존재하는 지역 간 격차를 측정하고 기술하는 것을 넘어서 이런 지역 간 격차를 만들어내는 근본적

원인으로 자본의 공간적 축적 과정을 제시한다. 도시공간의 생산과 지역불균등발전은 자본주의의 도시공간과 공간구조를 주어진 것으로 여기지 않고 생산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공간적 현상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관점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1) 공간정치경제학과 역사-지리적 진리

공간정치경제학은 1970년대에 사회와 공간을 분리해서 공간을 물신화하는 실증주의적 지리학에 반대해 등장했다(최병두, 1998). 1950년부터 1970년대까지 실증주의에 기초한 공간과학이 그 이전의 지역지리학을 대신해서 지리학의 학문적 패러다임을 형성했다. 특정 지역의 특성들을 기술하는 지역지리학의 반작용은 공간 그 자체 범칙성의 추구로 나아갔다. 공간과학은 거리와 위치로 공간적 현상을 설명하고자 했다. 공간은 사물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 것으로 물신화되었고, 이런 기하학적 공간개념은 사회와 공간의 이원론적 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점점 더 복잡해지는 자본주의적 공간 현상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1960년대 말 실증주의적 공간과학에 대한 비판으로 공간적 현상을 사회적 과정으로 해석하는 새로운 공간론이 제기되었고, 자유주의적 비판과 급진주의적 비판을 거쳐서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이 자리를 잡으면서 자본축적의 논리 속에서 도시공간의 생산, 지역불균등발전, 도시정치와 계획을 분석하는 마르크스주의적 공간정치경제학이 확립되었다(김용창, 2000a). 공간은 사회적 과정의 결과이자 요인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의 공간적 현상은 자본축적의 논리가 초래하는 공간과 사회의 변증법적인 통합 과정에서 분석되어야 한다(김왕배, 2000).

또한 공간정치경제학은 공간의 정치경제학으로 초월적 진리보다는 역사-지리적 진리를 추구한다(최병두, 1996). 기존의 사회과학은 시간과 더불어서 인간의 삶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규정하는 거시적이면서 동

시에 미시적인 조건인 공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정치경제학은 자본주의를 역사적 단계로 인식하지만 자본주의 내 시공간적 변동에 대해서는, 적어도 1980년대 이전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공간정치경제학은 자본주의에 대한 정치경제학을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이다. 이에 따라 공간정치경제학이 추구하는 진리는 시공간성을 초월한 진리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시공간적 국면들에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역사-지리적 진리이다. 특정 사회의 시공간성을 인식하는 역사-지리적 진리는 추상적 이론과 구체적 현실을 오가는 변증법적 과정에서 포착될 수 있다. 먼저 자본주의에 대한 추상적 이론을 구체적 현실, 즉 특정한 시공간에 적용하고, 이를 기초로 다시 추상적 이론을 재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경제학의 기본 요소들인 자본, 국가, 계급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의 역사적 사회 과정을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적 매개 개념들이 필요하다(김왕배, 2000).

하지만 공간을 포함해서 정치경제학을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언제나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다. 1980년대 이후 공간정치경제학은 이론과 현실의 괴리로 상당한 분화 과정을 거쳤다(김용창, 2000d). 1970년대 자본주의 위기가 초래한 체제 변화, 즉 유연적 생산 체계의 등장은 마르크스주의의 현실 적합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고, 유연적 생산 체계에서의 공간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르크스주의 이외의 새로운 이론적 자원이 탐색되었다. 구조화이론, 포스트모더니즘, 조절이론 등이 공간정치경제학에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다양한 시도들 중에서 가장 큰 흐름은 국지성(locality)의 강조이다. 현실에 존재하는 장소의 다양성과 모호성을 강조하는 국지성 논쟁은 자본주의의 무수히 많은 시공간적 국면들에서 역사-지리적 진리를 추구하는 공간정치경제학의 학문적 운명에서 매우 중요하다(최병두, 1998). 공간정치경제학이 새로운 비판이론들을 받아들여서 분명 더 유연해지고 그만큼 현실 설명력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유연성의 추구가 자본축적과 계급 관계라

는 일관된 논리를 모호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유연성보다는 목표를 잃어버린 혼란이기 쉽다.⁵⁾

최병두(2007b: 105)는 “현실 세계의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이론체계의 보완 또는 전환”은 필요하지만 “자본주의의 경향성을 이해하기 위한 마르크스주의의 내적 통찰력”을 여전히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그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현재 사회는 여전히 자본의 논리가 관철되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새로운 현상들에 대한 연구도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현상들을 설명하는 새로운 비판이론들은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 중범위 이론으로 여전히 자본주의 내에서 시공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본주의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포착할 때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시공간적으로 민감한 설명들이 자본주의의 기본 과정과 제약 조건에 대한 구조적 설명을 대체할 수 없다(김용창, 2000d). 필자는 이런 주장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틀 내에서 새로운 현상을 분석하느냐이다. 일례로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 개념들인 이질성과 차이를 자본주의의 일반 이론에서 받아들이려는 변증법적 시도는 크게 성공적이지 않았다(최병두, 2000d). 물론 포스트모더니즘을 유연적 생산 체계의 상부구조로 이해함으로써 여전히 자본축적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하비의 시도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이와 같은 변증법적 시도를 위한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5) 이 지점에서 정치경제학적 공간이론의 성립으로 공간과 사회를 별도의 독립적 실체로 보는 실증주의의 이원론적 관점은 극복되었지만 인문지리학에서 구조와 행위의 이원론적 관계는 아직도 유효하다는 최병두(1988)의 주장은 매우 많은 시사점을 가진다. 다만 이 논문에서 구조와 행위 그리고 시간과 공간 사이의 복잡한 관계는 다루지 않는다.

2) 자본의 필요에 의한 도시공간의 생산

자본주의의 도시공간은 자본축적, 재생산, 소비문화, 정치 측면에서 자본주의 이전의 도시공간과 구분된다(최병두, 1994a). 인간의 집단적 거주지로서 도시공간은 자본주의 이전부터 정치적·종교적·문화적·경제적 중심지로서 존재했다. 하지만 역사적 발전단계에 따라 도시공간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 자본주의 도시공간은 자본과 노동이 만나 자본주의적 생산을 수행하는 물적 토대로 생산되고, 자본주의적 계급 관계, 좀 더 구체적으로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생활수단을 제공하고, 동시에 자본주의의 일상적 소비생활이 이루어지는 문화공간이며, 마지막으로 경제의 여러 측면들을 결정하기 위한 정치적 권력투쟁의 장이다. 자본과 노동이 특별한 사회적 관계로 결합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논리가 도시공간의 다른 세 가지 측면들, 즉 재생산, 소비, 정치를 관통한다. 이처럼 자본축적과 계급 관계가 도시공간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도시공간은 자본주의 이전의 역사적 형태들과 다르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 도시공간은 자본의 필요에 따라 생산된다는 점에서 자본축적의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최병두, 2000a; Harvey, 1978). 자본주의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것은 생산 활동과 일상생활을 위한 다양한 구조물들, 흔히 볼 수 있는 공장, 주택, 도로 등이다. 이와 같은 공장, 주택, 도로 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를 강조해서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건조환경을 건설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 생산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자본과 노동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미래의 자본축적을 위한 새로운 건조환경을 짓는 것은 자본주의에 큰 부담일 수 있다. 하지만 생산 영역에서의 과잉축적(overaccumulation)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전환되어야만 하는 막대한 규모의 유희자본이 만들어진다. 이때 상당한 자본을 오랫동안 붙잡아둘 수 있는, 거기다가 미래의 자본축적을 위한 물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건조환경 부문은 자본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등장한다. 과잉축적 위기에 의한 생산영역에서 건조환경으로의 자본전환(capital switching)은 자본의 필요에 따라 건조환경이 생산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건조환경의 생산은 공간적 조정(spatial fix)으로 자본주의의 생존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다.

건조환경 생산의 구체적 과정은 토지시장에서 ‘이자 낚는 자본’의 순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의제적 가치의 형성과 토지의 사적 소유로 이루어진다(최병두, 1990b; Harvey, 1982: 330~372). 건조환경의 생산은 그 공간적 기초인 토지에 대한 자본투입을 필요로 하고, 토지로의 자본투입은 토지의 상품화를 전제한다. 하지만 인간의 노동생산물이 아닌 토지는 가치를 가질 수 없다. 여기서 의제적 가치의 형성이 대두된다. 가치를 가지지 않는 토지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유는 미래의 노동 또는 자본의 성과물에 대한 청구권을 바탕으로 의제적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한 토지소유자는 이 청구권을 행사해서 생산영역에서 만들어진 잉여가치의 일부를 지대의 형태로 전유한다. 이처럼 토지가 의제자본으로 기능함으로써 토지 시장은 이자 낚는 자본의 순환에 통합된다. 그리고 자본주의로 편입된 토지는 자본축적에 대해 모순적인 영향을 끼친다. 먼저, 토지에의 자본투입은 새로운 건조환경을 생산해서 미래의 자본축적에 필요한 물질 토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토지소유를 통한 이윤 추구는 미래의 노동이나 자본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초월한, 즉 자본축적에 부담이 되는 지대의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떤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날지는 자본가와 토지소유자의 계급 관계에 의해 역동적으로 결정된다.

자본가와 토지소유자 이외에 토지시장에서의 주요한 행위자로 국가를 들 수 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자본축적을 지원하기 위해서 토지 시장에 개입한다(최병두, 1992). 따라서 국가의 토지정책은 총자본의 장기적 이해관계를 실현시켜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쉽다. 하지만 국가는 자본의 종속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상대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 국가의

토지정책은 자본축적의 지원 이외에 사회적 관계의 안정적 재생산과 정치권력의 유지를 목표로 시행될 수 있다. 특히 이런 정책들은 자본 축적의 지원을 위한 토지정책이 사회적 관계의 안정적 재생산과 정치 권력의 유지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자본의 이해관계를 위한 토지정책은 자본축적과 관련된 토지문제를 다른 체계들, 특히 생활 체계에 전가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해결한다. 결국 자본을 위해서 생활체계 구성원들의 희생이 강요되고, 기층민중의 불만은 단기적으로 정치권력의 유지를, 장기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을 위협한다. 이렇기 때문에 국가는 자본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생활체계의 안정을 통해 정치권력을 유지하려는 토지정책을 실시한다. 물론 이런 정책에도 일정한 구매 능력을 가진 중간계층 이상의 집단을 우선시하는 계급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3) 감가에 의한 지역불균등발전의 동태성

지역불균등발전의 핵심 동력은 자본의 공간적 이동과 공간 분업의 전환이다(최병두, 1994b: 139~140). 특정 지역에서의 자본축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잉축적의 위기를 맞이한다. 과잉축적에 따른 이윤을 저하는 자본에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유인을 제공한다. 그러면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한 자본은 새로운 자본축적을 개시해서 ‘사회공간적 평균 이상의 초과이윤’을 획득한다. 그리고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노동의 분업은 공간적 형태를 띠는데, 이와 같은 노동의 공간적 분업은 초과이윤을 얻기 위한 생산 기술과 조직의 변화에 맞물려서 전환된다. 결국 초과이윤을 얻기 위한 자본의 공간적 이동과 공간 분업의 전환에 따라 자본주의의 공간적 편성은 끊임없이 불균등하게 전개된다. 그리고 지역 간 불균등성은 자본이 이동과 분업으로 사회공간적 평균 이상의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근원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격차를 단순히 시장이 실패한 예외적인

현상으로 취급할 수 없다.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자본축적 과정에 내재된 지역불균등발전의 가시적 형태로 인식하고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의 구조적 공간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지리적 팽창의 한계에서 자본주의를 지속시킬 수 있는 지역불균등발전의 재생산 기제는 과잉축적에 의한 기존 자본주의 도시공간의 감가(devaluation)이다(최병두, 2015; Smith, 2008). 공간적 조정은 유희자본을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자본주의가 확장될수록 아직 자본주의적 발전을 경험하지 못한 원시적 공간을 찾기가 힘들어진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자본주의 내에서 공간적 조정이 가능한 공간, 즉 자본주의적 발전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생산하는 것이다. 자본은 축적을 위해 이윤율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자본투입에 따른 발전은 과잉축적에 따른 이윤율 저하를 초래한다. 그러면 자본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원래 지역은 자본이 한동안 투입되지 않으면서 저발전(underdevelopment)을 경험한다. 저발전은 감가의 과정으로 임금, 토지 가격 등의 생산 비용을 낮춰서 차후에 높은 이윤율 획득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⁶⁾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과잉축적으로 유희화된 자본은 다시 원래 지역으로 되돌아간다. 이와 같은 시소운동은 단 두 개의 지역들에서 공간적 조정이 무한히 반복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발전과 저발전의 과정이 이윤율의 공간적 차이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이상 공간적 조정을 위한 공간은 자본주의 내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그리고 이런 작동 원리에 의해서 지역불균등발

6) 감가의 과정은 고정자본의 물리적·경제적 감가상각(depreciation)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여기서 경제적 감가상각은 ‘상대적 공간가치저하(spatial devalorization)’를 가리킨다. 상품생산에서 초과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으로 평가받는 위치이점은 사회적 가치의 총체인 가치 법칙에 의해서 지배받기 때문에 여타의 상품들과 같이 상대적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평가받는다. “가치증식을 위한 새로운 위치의 생산은 항상 또 다른 위치의 가치저하를 전제로 한다”(김용창, 2003: 121). 저 발전을 겪고 있는 지역은 다른 지역이 자본투자로 발전하는 사이에 투자 중단으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 저하를 겪는다.

전은 정태적 격차가 아니라 동태적 과정으로 유지된다.

4. 한국의 도시와 지역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제4절은 최병두가 실시한 한국의 도시공간 생산과 지역불균등발전에 대한 분석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최병두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은 한국의 공간적 현상을 자본축적의 논리를 통해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고속도로, 민자도로 등을 포함한 건설 부문 투자에 대한 분석(최병두, 2007d; 2010; 2016)은 건조환경 생산이 자본축적의 전체적인 과정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설명했고, 부동산시장의 가격 상승, 소유 편중, 변동성 확대에 대한 분석(최병두, 1990c; 1991a; 2009)은 일반적인 공급-수요 원리가 좀처럼 맞아 들어가지 않는 부동산시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주택의 상품화와 자본축적의 논리에 기초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대안적 설명 방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그리고 한국의 지역불균등발전에 대한 분석(최병두, 1990a; 1994b; 2003; 2004)은 지역불균등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지역 간 차이를 넘어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로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의 공간 환경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상당히 드문 상황에서 최병두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은 공간 현상을 자본축적의 관점으로 설명해서 공간 문제의 근본 원인을 자본주의의 발전에서 찾으려는 인식론적 전환을 촉구했다. 공간 문제를 물리적 현상을 넘어 사회적 과정으로 인식하는 방식은 필자와 같은 신진학자가 연구를 시작하는 기초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식론적 전환이 한국의 공간환경 연구에 끼친 영향은 상당하다. 하지만 최병두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이 한국 자본주의의 독특한 시공간성, 특수한 공간적 현상을 만들어내는 한국만의 독특한 자본축적 과정을 명확하게 규명했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이 논문은 공간으로의 자본투입, 토지주택의 금융화 그리고 수

도권 집중의 경향을 대상으로 최병두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이 가진 구체적인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대안적 연구 방향은 최병두(2007a)가 제시했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구축한다. 최병두(2007a)는 한국의 신자유주의화를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 더 구체적으로 시장을 위한 시장 개입의 확대로 제시했다.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들 중 하나인 한국은 1980년대 이후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중첩적 이행을 겪었다.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는 시장 지향적 신자유주의화에서 국가 개입의 증대라는 역설적 특성을 보여준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시장을 활성화시키라는 국제금융자본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국가는 다시 시장에 개입해야 했다. 그리고 최병두(2011a)는 현실의 신자유주의화를 탈취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by dispossession)을 통한 자본의 계급적 반격으로 규정하고 몇 가지 사례들을 들어서 한국의 국토 및 도시공간정책에서도 탈취에 의한 축적 과정을 확인했다. 하지만 한국의 신자유주의화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 즉 시장을 위한 시장 개입의 확대가 신자유주의의 일반적 자본축적 논리인 탈취에 의한 축적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그리고 폭넓게 분석되지 않았다. 필자는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에서 탈취에 의한 축적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현재 한국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공간성, 달리 말해서 한국만의 독특한 사회구조적 과정을 규명하는 작업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공간으로의 자본투입, 토지주택의 금융화, 수도권 집중의 경향을 사례로 한국의 공간환경에서 나타나는 자본축적에 대한 국가 개입의 확대와 이에 따른 자본의 계급적 이해관계 실현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방향을 모색한다.

1) 공간으로의 자본투입과 국가 개입의 확대

최병두(2016c: 517~519)는 몇 가지 거시경제 지표들을 활용해서 건조환경 생산이 경제성장의 동력이자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먼저 부문별 고정자본 투자액을 살펴보면 총고정자본형성에서 건설투자의 비중이 설비투자과 지식재생산투자에 비해 월등히 컸다. 1970년부터 1997년까지 건설 부문 투자 비중은 총고정자본형성에서 거의 70% 이상을 유지했다. 건설 부문의 투자는 건조환경의 생산을 위한 자본투자를 가리키므로, 건설 부문 투자의 높은 비중은 건조환경 생산이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건설 부문 투자 증감률과 경제성장률의 시계열적 변화는 상당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특히 1980년대 후반과 2000년대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시기에 건물 부문 투자 증감률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실물경제 위기로 인해 산업 부문에서 유희화된 자본이 국가의 부동산완화정책 또는 기업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투입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최병두(1991a: 174~175)는 1970년대 생산 영역에서의 과잉축적과 이에 따른 이윤율 저하 경향으로 유희자본이 급속하게 증가했고 이 유희자본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와서 1980년대 토지 가격이 폭등했다고 주장한다.⁷⁾ 이처럼 한국의 도시화 과정은 생산영역에서 건조환경으로의 자본전환과 자본주의적 과잉축적 위기에 대한 공간적 조정 논의에 딱 들어맞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생산 부문에서 건조환경으로의 자본전환을 보여주는 것과

7) 최병두(1991a: 174~175)는 생산영역의 과잉축적과 이윤율 저하 경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실질임금과 소비자물가에 비해 토지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을 수치로 제시한 이후 이와 같은 토지가격 상승을 주도한 집단으로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30대 재벌을 지목했다.

이와 같은 전환의 이유로 생산 부문에서의 과잉축적과 이윤율 저하 경향을 입증하는 것은 같지 않다. 자본주의의 공간적 조정으로서 자본 전환 논의의 핵심은 생산 부문의 이윤율 저하로 유흥화된 자본이 건조환경 생산에 투입되어 과잉축적의 위기를 일시적으로 지연시킨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생산 부문의 과잉축적에 따른 이윤율 저하 경향은 전체 논의의 구조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본전환 논의는 그 이론적 명성에 비해 실증적 분석이 많지 않다. King(1989)과 Christophers(2011)는 생산영역에서 건조환경으로의 자본전환은 검증했지만 생산 활동에서의 투자 감소와 건조환경에서의 투자 증가 사이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⁸⁾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자본전환 논의의 폐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생산영역과 건조환경 사이의 관계를 더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과 실증적 증거의 필요성을 가리킨다.⁹⁾

8) Feagin(1987), Bearegard(1994), Charney(2001)도 자본전환과 관련된 실증 분석을 실시했다. Bearegard(1994)는 미국의 1980년대 건축 호황에서 생산 영역으로부터의 자본전환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투자가 건축 행위의 실수요와 관련이 없어지는 탈연계 현상을 제시했다. Feagin(1987)는 미국 휴스턴의 사무용 건물을 사례로 금융기관의 건설 부문 투자의 시계열적 증감을 분석했지만 이와 같은 건설 부문 투자 추이를 생산영역과 직접적으로 대조하지 않았다. Charney(2001)는 건조환경과 생산 영역 간 자본전환보다는 부동산 부문 내 자본전환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서 분석했다.

9) 생산영역과 건조환경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부동산 부문의 자율성 측면에서 많이 논의되었다. 공간으로의 자본투입을 자본전환에 따라 생산영역에서의 과잉축적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하는 입장과 건조환경으로의 전환이 생산영역에서의 과잉축적 맥락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 부문의 자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건조환경의 생산이 생산영역의 과잉축적과 구분되는 별도의 고유 동학을 갖느냐 여부와 이 부동산 부문의 자율성이 상대적인지 아닌지가 주요 쟁점인 것은 분명하지만, 실증 분석들을 통해 생산영역에서 건조환경으로의 자본전환 자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전환을 초래하는 다양한 동력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과잉축적의 이윤율 저하 경향이 만들어내는 생산영역과 건조환경 사이의 이윤율 차이가 자본전환의 중요한 요인이지만, 신용의 생산과 분배를 통해서 부문별 자본투자를 증대하는 금융기관과 비시장적 방식인 제도를 통해서 특정 부문의 이윤율에 영향을 끼치는 국가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들이다. 어떤 요인이 자본전환에

대규모 자본투자와 긴 회전 기간을 특징으로 갖는 건조환경 생산은 일개 자본이 쉽게 선택할 수 없는 특별한 자본투자이기 때문에 자본의 필요 이외에 국가와 금융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최병두(2016c: 518)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부동산완화정책을 언급했지만 건조환경 생산의 구체적인 과정을 분석하지 않았다. 국가와 금융의 실질적 역할을 포함해서 한국의 건조환경 생산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생산영역의 과잉축적 위기라는 자본주의의 일반적 조건 이외에 공간으로의 자본투입을 촉진하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들을 포착할 수 있다.

한국의 특수성은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국가의 직접적인 건조환경 생산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최병두(2010: 317~321)는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을 분석하면서 자본주의적 생산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던 자본주의화 초기 시기에 대규모 건조환경의 생산이 가능했던 이유로 부국강병을 실현하기 위한 통치자의 ‘지전략(geo-strategy)’을 제시했다. 자본의 필요가 아니라 국가의 전략에 의해 건조환경 생산이 이루어졌다는 근거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재원 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의 재원은 공식적으로 휘발유세, 통행세, 통행료 수입, 대일 청구권자금, 양곡차관, 도로국채 등으로 마련되었다. 그리고 비공식적 재원조달 수단으로는 공권력을 활용한 용지 매수비의 감소와 베트남 전쟁 특수 자금의 활용을 들 수 있다. 1960년대 후반 막 자본주의적 생산체제를 갖추기 시작했을 때 과잉축적에 따른 유희자본은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건조환경의 생산을 위한 대규모 자본은 국가의 정치적 수단에 의해서 투입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국가 주도의 건조환경 생산은 발전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독특한 성격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최병두(2010: 325~331)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효과로서 시공간 압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느냐는 특정 사회의 시공간적 국면마다 서로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축을 통한 회전시간 단축과 구획화에 의한 불균등발전을 언급할 뿐 통치자의 지전략에 의한 건조환경 생산을 자본축적 논리로 설명하지 않는다.¹⁰⁾ 이와 같은 설명은 한국의 특수성이 자본축적의 논리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포착할 때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다.

장소의 특수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모두 갖춘 설명은 일레로 최병두(2007d)가 민자도로 건설사업 분석에서 언급한 국가의 최소운영수입보장을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구축할 수 있다. 최병두(2007d)는 민자도로 건설사업을 시장원리가 공공사업을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적 도시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분석하면서 민간자본의 최소수입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을 민자도로 건설사업의 주요 문제 중 하나로 기술했다.¹¹⁾ 하지만 필자는 최소운영수입보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듯이 한국의 민자도로 건설사업을 시장원리가 공공사업을 지배하는 일반적인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자본의 필요에 의한 시장 확대가 국가의 시장 개입을 통해서 실현되는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민자도로 건설사업의 다양한 문제점들, 즉 교통량 과다 예측, 실시협약 내용 변경, 최소운영수입 보장 등을 둘러싼 국가와 자본의 정치경제적 관계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을 넘어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의 구체적 과정으로 분석할 때, 우리는 탈취에 의한 축적을 통한 자본의 계급적 반격이 국

10)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이 결과적으로 운송 비용을 단축시켜서 생산성 증대에 기여했으므로 “경부고속도로의 건설과 이용은 기본적으로 자본축적의 물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경제적 논리에 근거한다”(최병두, 2010: 331)라는 주장은 몇 가지 지점들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먼저 결과로 행위의 의도를 추정하는 위험성이다. 둘째로 통치자의 지전략의 핵심은 부국강병을 통한 정치권력의 정당화이었는데, 어떤 역사적 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목표를 자본축적의 논리와 어떻게 연결시킬지가 아직 모호하다. 그러므로 통치자의 지전략을 자본축적의 논리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11) 한국은 1998년 민간자본투자촉진법을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면서 민간자본에서 예상수입의 90%까지 국가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최병두, 2007d: 679~680).

가의 개입 축소가 아니라 개입 확대를 통해 한국의 도시공간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¹²⁾ 한국에서 신자유주의화는 IMF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국면에서 발전주의 국가라는 역사적 유산에 토대를 두고 있는 국가에 의한 재분배로 촉진되었다. 국가가 자본의 손실을 부담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통한 ‘손실의 사회화와 이윤의 사유화’, 즉 경제위기에서 민간자본의 상대적 이윤 추구가 가능해졌다.

민자도로 건설사업을 국가에 의한 재분배가 아니라 탈취에 의한 축적의 다른 유형인 금융화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최신 금융기법의 토대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수익 보장과 위험 분담이었다. 최병두(2011b: 276~279)는 민자도로 건설사업을 신자유주의적 도시화 과정에서 금융자본의 역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민자도로 건설사업에서는 최신 금융기법의 도입보다 국가의 수익 보장과 위험 분담이 더 중요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순수한 의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기법이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담보 또는 신용에 기초한 전통적 금융과는 다르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만을 기초로 사업비용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하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은 민자도로 건설사업에서 기본적인 최소한의 현금흐름을 보증하는 것으로, 한국의 민자도로 건설사업에서 국가는 금융자본에게 사실상의 신용

12) 최병두(2011a)는 이명박 정부의 국토 및 도시공간정책을 분석하면서 크게 두 가지 방식의 탈취에 의한 축적을 설명했다. 먼저 4대강사업, 녹색성장사업, 광역권개발과 같은 대규모 토건사업은 공적자본을 투입해서 사회적 부를 건설자본과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고, 도시재개발과 뉴타운사업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식이다. 필자는 국가의 최소운영수입보장에 기초한 민자도로 건설사업이 위의 대규모 토건사업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분배를 통한 신자유주의화를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자본계급의 권력을 복원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탈취에 의한 축적은 확대재생산을 통한 부와 소득의 경제적 창출보다는 사회적 재분배에서 노동계급의 몫을 줄여 자본계급이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보증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¹³⁾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고금리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자금재조달(refinancing)은 국가의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이자를 계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협약 해지시 국가가 채무를 인수한다는 보장이 있었기에 가능한 방식이었다. 사업에 대한 일정한 현금흐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출자금에 대한 배당보다는 채무로서의 이자 지급이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데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후순위 채권은 금리가 높은 대신 청산시 변제순위에서 뒤로 밀리지만 국가가 채무를 인수한다면 이와 같은 위험은 큰 의미가 없다. 물론 국가의 수익 보장과 위험 분담의 구체적 내용은 개별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금융자본의 이윤추구 방식은 세부적으로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풍부한 사례 분석을 통해 금융자본이 국가의 시장 개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토지주택의 금융화와 도시불평등의 확대

최병두(2009: 145~149)는 2000년대 주택 공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이유 중 하나로 부동산의 금융자본화를 제시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도시재개발에서 책정된 높은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의 상승 경향은 다시 도시재개발사업의 분양가를 끌어올렸다. 시장에서 높은 분양가의 신규아파트 공급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의 증가와 조응했다. 투기적 가수요의 증가로 일반적인 공급-수요 원리에 맞지 않는 주택 공급 확대 상황에서의 주택 가격 상승을 설명할 수 있다. 이때 투기적 가수요를 촉진한 것은 저금리에 기초한 부

13)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두 개의 정황적 근거들이 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포함한 민간투자법이 제정된 이후로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민자유치의 성과가 두드러졌다(최병두, 2007d: 680). 그리고 한국에서는 일반 건설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시공사가 별도로 지급보증을 제공한다.

동산 관련 금융의 급격한 증가이었다.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모기지(mortgage)의 증가는 투기적 가수요를 직접적으로 지원했고, 부동산펀드와 같은 부동산 간접투자의 새로운 방식들이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부동산의 금융자본화로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결합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이자율의 상승을 통한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연쇄적 폭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의 금융자본화가 진행될수록 부동산시장은 이자율의 등락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이 분석은 자본주의 주택 시장의 변동성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경향, 즉 부동산의 금융자본화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부동산의 금융화에 대한 분석은 부동산시장에서 금융행위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 즉 금융논리의 전면적 적용이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¹⁴⁾ Harvey(1982: 367~372)는 토지의 금융자산화 경향을 지적하면서 토지가 순수한 금융자산으로 취급될 때 토지소유와 지대 청구가 토지로의 자본투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자본의 요구에 부합해서 합리적 토지이용을 촉진하는 조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부동산 금융화 주장의 핵심은 금융논리의 전면적 적용이 부동산시장을 넘어 자본축적 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실증분석으로 Massey and Catalano(1978)는 토지소유자의 성격에 따른 구분에 기초해서 토지시장의 변화를 포착했고,¹⁵⁾ Haila(1988)는 토지시장의 변화를 토대로 토지의 금융자산화 경향을 입증하려고 했다. 이런 분석들은 토지시장의

14) 금융화는 “한편으로 금융행위(투자펀드, 채권)의 증가, 다른 한편으로 금융 논리 및 기술(부동산채권의 활용, 증권화, 파생상품)의 전체 도시 구조에의 전면 적용”을 가리킨다(Enright, 2012: 255; 강내희, 2014: 395에서 재인용).

15) 먼저 구토지소유, 산업적 토지소유, 금융적 토지소유를 구분한 다음 토지시장에서 금융적 토지소유의 지배력 확장을 밝혔다. 여기서 구토지소유는 교회, 왕실, 귀족의 토지소유를, 금융적 토지소유는 은행, 보험, 연금기금, 부동산회사의 토지소유를 가리킨다.

변화를 중심으로 토지의 금융자산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반면에 Coakley(1994)는 금융자본의 입장에서 유가증권과 토지소유권을 대조해서 토지가 완전한 금융자산으로 취급받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부동산의 금융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 방식을 벗어나서 금융시장의 측면에서 독특한 자산인 부동산이 어떻게 금융논리에 포섭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부동산에 대한 금융자본의 인식을 파악할 때 우리는 부동산시장에서 금융논리의 적용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런 적용이 부동산시장을 매개로 자본축적 논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포착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자본주의에서 나타난 경제의 금융화는 이와 같은 새로운 관점의 적시성을 배가시킨다. 금융 부문이 실물 부문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금융화에 대한 분석은 금융자본의 인식으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subprime crisis)의 발생은 주택 금융화에 따른 주택가격의 변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2000년대 초반 저소득층에 대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행은 미국의 자가소유율을 급격하게 상승시켰다. 하지만 2006년 이후 금리 상승과 주택 가격 하락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채무불이행이 증가하면서 수십만의 주택들이 압류되는 서브프라임 위기가 발생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확장 과정을 금융과 공간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금융자본은 주택 가격과 가계소득의 분리에 기초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투자자가 선호하는 최상위 신용등급 증권들을 더 많이 제조해낼 수 있는 독특한 자산으로 인식했고, 이와 같은 모기지의 특성은 기존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과 다르게 신규 건설 없이 자본투입이 이루어지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금융적 상품화에 의해 뒷받침되었다(이후빈, 2017). 실물적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금융적 상품화는 주택가격 상승과 하락 그리고 회복에서 지역차별적 주기를 초래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많이 발행된 서브프라임 근린은 주택호황기에 다른 근린들

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더 낮았고 주택불황기에 주택가격 하락률이 더 높았다(Zou, 2015). 그리고 2000년에 주택가격이 낮았던 소수민족 저소득 근린은 그렇지 않은 근린들보다 2014년 기준으로 주택가격 회복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Raymond et al., 2016). 더 적게 오르고 더 많이 내렸는데 회복까지 더디다는 것은 서브프라임 근린에서 재산 가치의 상대적 손실을 가리킨다. 주택의 금융화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자가 소유율을 높여서 도시불평등을 어느 정도 개선한 듯 보였지만 전체 서브프라임 주기에서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재산 가치를 상대적으로 깎아내리면서 도시불평등을 오히려 확대했다. 이처럼 금융자본의 인식에 기초한 분석은 탈취에 의한 축적의 한 유형인 금융화가 도시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자본계급의 권력 복원 수단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의 도시공간에서 금융화 경향이 도시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신진욱·이은지(2012)는 금융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강력한 한국에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확장처럼 저소득층으로까지 주택 구입의 기회가 확장되는 경향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독특한 주택불평등 형태로 경직된 분절 구조를 제시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할 수 있는 자격과 금액이 제한된 상태에서 주택가격 상승은 자가 소유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정한 소득과 가족적 배경을 가진 계층”만이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다(신진욱·이민아, 2014: 151).¹⁶⁾ 주택가격 상승이 초래한 자가 소유의 진입 장벽은 “자산 가치를 갖는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는 계층”과 “사적 임대차 관계에 종속된 채 자가 부문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계층” 사이의 분절 구조를 유지시킨다(신진욱·이은지, 2012: 219). 그리고 이런 경직된 분절 구조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기자본의 구축 기회는 전자의 계층만 누릴 수 있고, 이에 따라 기존의 소득수준과 가족

16) 여기서 소득은 분가가구의 소득수준을, 가족적 배경은 출신가구의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을 가리킨다.

적 배경의 차이에 의한 도시불평등은 더욱 확대된다. 이와 같은 분석은 국가에 의한 금융화의 역제가 미국의 사례와는 다르게 도시불평등을 확장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현재의 상황은 한국의 신자유주의화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미국에서 부동산의 금융화를 가능하게 했던 핵심 동력은 국가의 제도적 발전이다(Gorton, 2006). 증권화, 리츠, 2차 모기지시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없었다면 공간적 고정성을 가진 부동산을 유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시장과 접촉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시장을 위한 시장 개입의 확대는 한국에서 이와 비슷한 제도적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주택의 금융화에 의해 한국 도시불평등의 경직된 분절구조는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다.

3) 수도권 집중의 경향과 공간적 조정의 역제

최병두(2004)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수도권 집중의 현실적 문제들을 자본주의의 내재적 경향인 지역불균등발전의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인데,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논쟁에서 수도권 집중과 같은 커다란 지역 간 격차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자본축적의 논리에 따른 지역불균등발전이 현재와 같은 수도권 집중을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도시와 농촌의 불균등, 1970년대 경공업 지역과 중화학공업지역의 불균등, 1980년대 중앙도시와 지방도시의 불균등, 1990년대 수도권의 집중은 공업과 중화학공업 발전, 구상기능과 실행기능의 분리와 통합이라는 자본축적 과정의 공간적 결과이다. 1990년대 이후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확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것은 새로운 지역의 포섭을 통해 자본축적을 지속하기 위한 공간적 조정이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 조응하는 신행정수도 건설

은 정치권력에 의한 공간적 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수도권 집중과 신 행정수도 건설을 지역불균등발전과 공간적 조정으로 설명하는 분석은 한국의 독특한 공간현상을 자본축적의 논리에 기초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과 같은 일정하게 고정된 지역불균등발전과 공간적 조정에 기초한 역동적 지역불균등발전을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1960년대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 공간 현상이다. 그렇다면 지역불균등발전 측면에서 검토해야할 과제는 수도권이 지속적인 자본투입에도 불구하고 공간적 조정 없이 과잉축적의 위기를 어떻게 지연시키는가이다.¹⁷⁾ 아마도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요소, 예를 들어 첨단기술산업, 생산자서비스산업과 같은 새로운 산업의 등장, 구상 기술과 실행 기능의 통합으로 나타나는 생산 조직의 변화, 시장규모효과에 따른 집적이점의 증가 등이 수도권의 과잉축적을 늦추는 동력들일 것이다. 이런 동력들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는 수도권의 과잉축적 경향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산업구조조정에서 공간 분업의 경로 의존과 수확 체증에 따른 누적적 인과가 과잉축적에 따른 공간적 조정을 어떻게 지연시키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수도권으로의 지속적 집중이라는 한국의 독특한 공간현상을 자본축적 논리에 기초해서 이해할 수 있다.¹⁸⁾ 그리고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의 공간적 조

17) 공간적 조정은 지역 여부에 따라 내적 공간적 조정과 외적 공간적 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최병두, 2015: 49). 내적 공간적 조정은 동일한 지역에서 생산 영역의 유희자본을 건조환경에 투자한 것이고, 외적 공간적 조정은 다른 지역의 건조환경에 대한 투자를 가리킨다. 이런 구분에 기초해서 수도권으로의 끊임없는 집중 과정에서도 (내적) 공간적 조정이 일어났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공간적 규모(scale)를 국가에서 도시로 낮춰서 수도권 내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외적) 공간적 조정의 발생을 지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병두(2004)는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의 확장을 공간적 조정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공간적 조정은 국가적 규모에서의 (외적) 공간적 조정을 의미한다.

18) 수도권 집중은 한국의 특수성이 아니라 공간적 규모의 문제일 수 있다. 스미스

정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이 어떤 때보다 집적의 요소와 공간적 조정의 미묘한 힘겨루기를 파악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일 수 있다.

수도권 집중과 이에 대한 공간적 조정의 양 측면에서 국가는 모순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먼저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특정 지역부터 생산 시설을 입지시키는 국가의 개발 계획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지역불균등발전은 국가 주도적인 성격을 가진다(최병두, 1990a). 통치자의 지전략에 의해 건설된 “경부고속도로는 이에 포섭된 지역(수도권과 동남임해지역)과 배제된 지역(호남지역과 강원지역) 간 불균등 발전을 틀 지웠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에 포섭된 지역들 내에서도 불균등 발전을 심화시켜 수도권과 그 외 지역들 간을 구획화”했다(최병두, 2010: 312). 또한 충청권으로의 공간적 조정에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려는 국가의 규제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신행정수도 건설은 공간적 조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최병두, 2004: 40). 마지막으로 최병두(2004: 49~50)는 한국의 지역불균등발전에서 국가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따라 국가의 시장 개입이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위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도시공간의 생산에 있어 현실의 신자유주의화는 시장을 위한 시장 개입의 확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집중의 요소와 공간적 조정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있어 국가가 시장 개입의 축소 또는 확대를 통해서 수도권 집중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에서 지역불균등발전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는 불균등발전의 경향이 도시적 규모에 비해 국가적 규모와 국제적 규모에서 명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가 아메리카 제국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제적 규모로까지 자본의 시소운동 개념을 확대하였다(최병두, 2015: 27~42). 단순한 누락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국가적 규모에서 불균등발전의 경향은 크게 논의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을 국가적 규모에서의 불균등발전으로 접근하는 것은 학문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물론 한국의 특수성, 국가적 규모, 더 나아가서 공간적 규모의 생산까지 고려해서 수도권 집중을 분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본축적 논리의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이 논문은 최병두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비판적으로 읽으려는 시도로써 장소의 특수성과 논리적 일관성의 관점에서 한국의 도시공간 생산과 지역불균등발전에 대한 최병두의 분석을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자본축적의 논리가 한국 자본주의의 독특한 시공간성을 포착하는데 얼마나 유용한지를 검토했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 최병두는 한국의 다양한 공간현상들을 정치경제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고, 최병두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은 공간문제를 물리적 현상을 넘어 사회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인식론적 전환을 촉구했다. 하지만 최병두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이 한국만의 독특한 공간적 자본축적 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했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공간으로의 자본투입에 대한 분석에서 최병두는 추상적인 공간적 조정의 과정을 한국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거나(최병두, 2016c: 517~519), 한국의 특수성으로 통치자의 지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그리고 토지주택의 금융화에 대한 분석(최병두, 2009: 145~149)은 부동산시장에서 금융논리의 전면적 적용이 한국의 부동산시장과 자본축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탈취에 의한 축적의 한 유형인 금융화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최병두(2004)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수도권 집중을 지역불균등발전으로 분석했지만 공간적 조정을 억제하는 한국의 독특한 집중 경향을 자본축적의 논리로 설명하지 못했다. 다만 한국에서 나타나는 국가 주도적 지역불균등 발전을 현상적으로 기술할 뿐이었다(최병두, 1990a; 2004; 2010). 종합하면 추상적 이론인 공간정치경제학을 그대로 적용한 분석은 한국 공간환경의 특수성을 포착하지 못했고, 장소의 특수성을 강조한 분석은 일관된 자본축적의 논리로 이어지지 못했다.

필자는 현재 한국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공간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병두(2007a)가 제시했지만 아직 정교하게 다듬지 않은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자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모순적 상황을 활용해서 자본이 탈취에 의한 축적을 강화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발전주의적 탈취에 의한 축적이 한국의 독특한 공간적 자본축적 논리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민자도로 건설사업에서 국가의 최소운영수입보장은 탈취에 의한 축적의 한 유형인 국가의 재분배가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나타낸다. 주택 금융화는 주택가격 변동을 통해서 도시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는데, 아직 한국의 도시공간에서 금융화 경향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분석되지 않았다. 다만 국가에 의한 금융화의 역제가 기존의 자가소유와 임대점유 사이의 분절구조를 강화시켜서 금융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도시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과 이에 대한 공간적 조정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서 국가의 시장 개입 확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분석함으로써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에서 지역불균등발전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의 공간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탈취에 의한 축적은 국가의 시장 개입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최병두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연구 방향을 최병두가 제시한 개념을 중심으로 구축한다는 점에서 최병두가 필자와 같은 신진학자들에게 끼친 영향은 상당하다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의 비평은 최병두의 광범위한 연구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도시공간의 생산과 지역불균등발전만을 대상으로 장소의 특수성과 논리적 일관성이라는 제한적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를 가진다. 최병두(2014; 2016a)는 사회 이론에 기초한 지역연구의 새로운 연구방법론인 신지역지리학이 한국의 지리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했다. 지역의 특수성과 보편성 사이의 이분법적 구분을 극복하려는 신지역지리학의 지향점은 이 논문에서 비평의 기준으로 제시한 장소의 특수성과 논리적 일관성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신지역지리학에 대한 최병두의 연구를 분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비평의 기준으로 장소의 특수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동시에 제시한 것은 기본적으로 자본축적의 논리를 강조하는, 즉 자본축적의 논리 속에서 장소의 특수성을 규명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한다. 여기에 자본주의적으로 생산된 장소 이외의 대안적 장소를 희망하고 그려보는 시선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자본주의적 공간생산의 대안을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최병두(2002; 2012; 2016b)의 연구들, 즉 장소성의 상실과 복원, 장소 정체성의 재구성, 도시적 소외와 정의로운 도시에 대한 연구들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 논문의 비평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원고접수일: 2018년 11월 16일

심사완료일: 2018년 12월 14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18일

최종원고접수일: 2018년 12월 19일

❖ Abstract

A Critical Reading on Choi Byung-Doo's Political-Economic Analysis
of Korean Cities and Regions

Lee, Hoobin

This paper attempts to critically read Choi Byung-Doo's political-economic analysis of cities and regions. The object of review is the analysis of Korean urban space production and uneven regional development conducted by Choi Byung-Doo, and the criteria for review is the integration of place characteristics and logical consistency to explain the concrete reality of Korea with capital accumulation logic. The political-economic analysis of Choi Byung-Doo urged the epistemological shift of space problem as social process beyond physical phenomenon, but there are some disappointments as to whether the unique spatio-temporal nature of Korean capitalism has been clarified. The analysis that applied the abstract theory of spatial political economy did not captur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spatial environment, and the analysis emphasizing the characteristics of place did not consistently lead to the logic of capital accumulation. I argue that there is a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developmental neoliberalization in order to grasp the current spatio-temporal nature of Korean capitalism.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unique neoliberalization in Korean cities and regions, that is, the state intervenes in the market to activate the capital investment, and the capital strengthens the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with utilizing this contradictory situation.

Keywords: spatial political economy, urban space production, uneven regional development, place, capital accumulation

참고문헌

- 강내희. 2014. 『공간의 금융화』,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문화정치경제』. 문화과학사.
- 김왕배. 2000. 『공간정치경제학의 기본 개념과 분석틀』. 한국공간환경학회 엮음. 『공간의 정치경제학-현대 도시 및 지역 연구』. 아카넷.
- 김용창. 2000a. 『공간정치경제학의 등장과 성립』. 한국공간환경학회 엮음. 『공간의 정치경제학-현대 도시 및 지역 연구』. 아카넷.
- _____. 2000b. 『공간정치경제학의 분화와 재구성』. 한국공간환경학회 엮음. 『공간의 정치경제학-현대 도시 및 지역 연구』. 아카넷.
- _____. 2003. 『공간유물론-자본주의 역사지리의 공간생산론을 위해』. 맑스코뮤날레 조직위원회 엮음. 『지구화시대 맑스의 현재성 2』. 문화과학사.
- 신진욱·이민아. 2014. 『주택보유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요인과 가족자원의 영향-분가가구의 자가 취득에 대한 사건사 분석, 1999~2008』. 《경제와사회》, 101, 151~183쪽.
- 신진욱·이은지. 2012. 『금융화 시대의 주택체제 변동의 네 가지 경로-국제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 주택불평등 구조의 특성』. 《경제와사회》, 95, 218~253쪽.
- 이후빈. 2017. 『금융자본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확장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금융적 상품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병두. 1988. 『인문지리학 방법론의 새로운 지평』. 《대한지리학회지》, 23(2), 15~36쪽.
- _____. 1989. 『한국공간환경의 위기』. 《사회와 사상》, 11, 11~28쪽.
- _____. 1990a. 『경제구조의 개편과 지역불균등발전』. 《사회와 사상》, 24, 284~302쪽.
- _____. 1990b. 『자본주의 사회와 토지·주택문제』. 《경제와사회》, 7, 9~44쪽.
- _____. 1990c. 『도시 토지 및 지대 문제에 관한 연구-지대유형에 따른 대구시 지가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25(2), 85~111쪽.
- _____. 1991a. 『주택문제의 현황과 본질』. 최병두 저. 『한국의 공간과 환경』. 한길사, 171~186쪽.
- _____. 1991b. 『한국 공간환경 연구의 현황과 과제』. 《공간과사회》, 1, 27~54쪽.
- _____. 1992. 『자본주의 국가의 성격과 토지정책』. 《공간과사회》, 2, 112~145쪽.
- _____. 1994a. 『자본주의 도시공간의 정치경제학』. 《문화과학》, 5, 157~182쪽.
- _____. 1994b. 『산업구조조정과 지역불균등발전-1980년대』. 《대한지리학회지》, 29(2), 137~165쪽.
- _____. 1996. 『데이비드 하비의 역사-지리유물론-공간의 정치경제학과 포스트모더니티』. 《경제와사회》, 31, 204~239쪽.
- _____. 1998. 『지리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공간정치경제학』. 《오늘의 문예비평》, 41~57쪽.

- _____. 2000a. 『도시 공간의 혼돈과 도시적 삶의 피곤』. 《당대비평》 11, 143~164쪽.
- _____. 2000b. 『전통적 연구방법론의 재검토』. 한국공간환경학회 엮음. 『공간의 정치경제학-현대 도시 및 지역 연구』. 아카넷.
- _____. 2000c. 『구조화이론과 도시·지역 연구』. 한국공간환경학회 엮음. 『공간의 정치경제학-현대 도시 및 지역 연구』. 아카넷.
- _____. 2000d. 『포스트모더니즘과 도시·지역 연구』. 한국공간환경학회 엮음. 『공간의 정치경제학-현대 도시 및 지역 연구』. 아카넷.
- _____. 2003.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논의와 쟁점』. 《지리학논구》, 23, 389~406쪽.
- _____. 2004. 『신행정수도 건설과 수도권의 발전 전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1), 34~52쪽.
- _____. 2007a.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이행과 공간정책의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1), 82~103쪽.
- _____. 2007b. 『마르크스주의의 공간환경 연구를 둘러싼 논쟁과 쟁점』. 《마르크스주의연구》, 4(1), 96~132쪽.
- _____. 2007c. 『기업주의 도시 전략의 논리와 한계』. 《경제와사회》, 75, 106~138쪽.
- _____. 2007d. 『도시 인프라 시설을 위한 민자 유치-대구시 범안로 민자도로의 운영 실태와 대책』.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6), 674~694쪽.
- _____. 2009. 『도시 주택시장의 변동성과 부동산 정책의 한계-IMF 위기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1), 138~160쪽.
- _____. 2010. 『경부고속도로: 이동성과 구획화의 정치경제지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3), 312~334쪽.
- _____. 2011a. 『신자유주의의 불균등발전과 국토 및 도시 공간 정책의 변화』. 《국토지리학회지》, 45(3), 455~474쪽.
- _____. 2011b.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기업주의 도시 프로젝트』.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4(3), 263~285쪽.
- _____. 2015. 『닐 스미스의 불균등발전론과 자본주의의 지리학』. 《공간과사회》, 25(4), 11~61쪽.
- _____. 2016. 『한국의 자본축적 과정과 도시화: 도시 위기와 대안』.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9(3), 512~534쪽.

Beauregard, R. 1994. "Capital Switch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United States, 1970 - 89." *Environment and Planning A*, 26(5), pp. 715~732.

Charney, I. 2001. "Three Dimensions of Capital Switching within the Real Estate Sector: A Canadian Cas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5(4), pp. 740~758.

Christophers, B. 2011. "Revisiting the Urbanization of Capital." *Annals of the Association*

- of *American Geographers*, 101(6), pp. 1347~1364.
- Coakley, J. 1994. "The Integration of Property and Financial Markets." *Environment and Planning A*, 26(5), pp. 697~713.
- Enright, T. 2012. *Building a Grand Paris: French Neoliberalism and the Politics of Urban Spatial Production*.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Santa Cruz.
- Feagin, J. 1987. "The Secondary Circuit of Capital: Office Construction in Houston, Texa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1(2), pp. 172~192.
- Gotham, K. 2006. "The Secondary Circuit of Capital Reconsidered: Globalization and the U.S. Real Estate Secto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2(1), pp. 231~275.
- Haila, A. 1988. "Land as a Financial Asset: The Theory of Urban Rent as a Mirror of Economic Transformation." *Antipode*, 20(2), pp. 79~101.
- Harvey, D. 1978. "The Urban Process under Capitalism: A Framework for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1), pp. 101~131.
- _____. 1982. *The Limits to Capital*. Oxford, UK: Blackwell(『자본의 한계』. 1995. 최병두 옮김. 한울).
- King, R. 1989. "Capital Switching and the Role of Ground Rent: 2 Switching between Circuits and Switching between Submarkets." *Environment and Planning A*, 21(6), pp. 711~738.
- Massey, D. and A. Catalano. 1978. *Capital and Land: landownership by Capital in Great Britain*. London: Edward Arnold.
- Raymond, E., K. Wang and D. Immergluck. 2016. "Race and Uneven Recovery: Neighborhood Home Value Trajectories in Atlanta before and after the Housing Crisis." *Housing Studies*, 31(3), pp. 324~339.
- Smith, N. 2008. *Uneven Development*, 3rd edition. Athens, GA: Georgia University Press(『불균등발전: 자연, 자본, 공간의 생산』. 2017. 최병두·이영아·최영래·최영진·황성원 옮김. 한울).
- Zou, Y. 2015. "Subprime Mortgages and Housing Price Variations in the Philadelphia Metropolitan Area." *The Professional Geographer*, 67(3), pp. 412~426.